문재인 "중기 청년 정규직 채용 지원"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 임금 전액 3년 동안… 1년 5만명 정부 지원 '추가고용지원제'"

미래성과공유제 · R&D 지원 2배 확대 ·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추가고용지원제도'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선후보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1년에 5만 명을 지원해 청년정규직 15만 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는 제도"라며 "중소기업은 2명의 임금으로 3명의 고용을 할 수 있어서 일자리를 크게 늘릴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노동자가 땀 흘려 기업을 키우면 기업이 성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미래성과공유제도'를 도입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겠다"며 "신산업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해 벤처기업 성장의 장애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이 힘을 합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 상 '담합'에서 제외해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청 재창업전용펀드를 확대하겠다"며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 재창업을 위한 창업 자금을 3번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실패한 창업자의 사업상 개인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겠다"며 "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지난 대선부터 공약으로 강조했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앞의 정부에 행정 부처를 마구 바꾸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기존 정부 조직은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기능 재편을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를 승격하고 신설하는 것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단언했다.

문 후보는 현행 3배 수준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최대 10배까지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저는 3배 가지고는 중소기업이 소송하기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재벌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려면 상당히 많은 보복과 심지어 블랙리스트로 다른 대기업과 거래하지 못하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부연했다.

문 후보는 이외에도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일방적 계약파기 등 불공정 대기업 엄중 처벌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향 조정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처벌 강화 ▲부당 내부거래, 편법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일감몰아주기, 기술탈취,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은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새 정부는 더 이상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겠다.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날 참석자가 청와대에 경제민주화 관련 보좌관을 두는 것을 제안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뉴시스

부산 소녀상 문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10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부산 소녀상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애국심 · 국가관 확실"

전직 기무사 지휘관 22명, 文 지지

전직 기무사령부 지휘관들이 1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지낸 기찬수 장군 등 22명의 기무사 출신 장군과 대령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문 후보의 확실한 애국심과 국가관, 그 진정성을 직접 확인했다. (그에) 동의하는 기무사 출신 지휘관들의 판단과 믿음에 함께 해 달라"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군 최고의 강한 보수 이미지를 가진 국군기무사령부 지휘관 출신들이 민주진보진영 대선후보를 지지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지선언에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지난 9년간 이명박 · 박근혜 정부는 안보무능의 극치를 보여 왔다"며 "보수라는 가짜 탈을 쓰고 '보수정권의 안보는 문제가 없다'는 오만한 행태를 보였으며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을 방치하고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신들의 정권 유지 방안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천안함 사건 등 북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중요 직위자들 중 국방장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사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며 피부질환인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직격했다.

이들은 "다수의 충직한 군인들은 뒤로 밀려나고 소수의 정치군인들이 득세한다면 우리 군은 늘 정권의 방어막 역할 밖에 못한다"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뉴시스

박원순 "문재인과 함께 걷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지난 당내 경선당시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났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의 서울시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박 시장은 "다 가져가시라"고 화답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의 박 시장 집무실을 찾아 "우리 박원순 시장의 지난 5년간 서울시정의 성과는 우리 국민 모두 잘 알고 있다. 특히 혁신이 무엇인지 소통이 무엇인지 잘 보여줬다"며 "서울시의 검증된 정책들, 또 검증된 인재들을 제가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는 박 시장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꾼 촛불집회가 가장 평화롭고 안전하게 끝난 데에는 박 시장과 서울시의 공이 대단히 크다"며 "제가 정권교체하면, 서울시와 함께 촛불시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이같은 문 후보의 말에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기 바란다. 서울시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혁신의 도시"라며 "그간 서울시가 성취하고 실험한 많은 좋은 정책들을 다 가져가시라. 로열티는 받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문 후보와 저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과거 3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희는 동지였고, 현재도 동지고 앞으로도 동지"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우병우, 오늘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심사 결과는 밤 늦게 나올 듯

우병우(50 · 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가를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11일 열린다.

박영수(65 · 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말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바 있어 이번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11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49) 부회장 등 사례에 비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21일 열린 첫번째 영장심사 당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50분께까지 5시간20여분 동안 심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3월 초부터 우 전 수석과 근무 인연이 적은 이근수 부장검사의 첨단범죄수사2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50여명의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당시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 확인을 위해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도 다수 소환해 조사했다. 또 민정수석실 파견 후 복귀한 검사들을 소환하는 등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6시간4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소환조사 직전 "우 전 수석의 혐의 사실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따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며 추가 혐의가 있는 사실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우 전 수석은 줄곧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및 특검 소환과 지난 2월 영장심사 당시 우 전 수석은 "최씨를 모른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인사개입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